

중앙은행 총재 인사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경제포커스



나지홍
논설위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1월 30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후임으로 케빈 워치 전 연준 이사를 지명한 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트럼프 2기 출범 후 1년간 20%가량 오르며 상승 장구하던 나스닥지수는 워치 지명 이후 한 달간 4% 넘게 조정받았고, 워치 지명 전 9만달러에 육박하던 비트코인은 7만달러 밑으로 20% 넘게 추락했다. 그는 2011년 벤 버נק 의장의 양적 완화(채권을 사들여 돈을 푸는 정책)에 반대하며 14년 임기가 보장된 연준 이사직을 던진 전력이다. 이 때문에 향후 연준이 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의 고삐를 죄는 매과 성향으로 돌아설 것이라 우려가 확산된 것이다.

워치가 격정과 달리 금리를 낮추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선호하는 비둘기파로 변신할 것이라 전망도 있다. 워치가 임명권자인 트럼프의 뜻을 거스르기 어려울 것이라 시각 때문이다. 트럼프는 올 11월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압박해 왔다. 통상적으로 금리를 낮추면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워치

는 민주당 정권 때는 경제 브레이크를 밟으려 하고, 공화당이 집권하면 가속 페달을 밟으려 하는 전형적인 공화당 충성파”라며 그를 ‘정치적 동물(political animal)’이라고 규정했다.

워치의 분석이 매과인지, 비둘기파인지 알려면 두 달여를 더 기다려야 한다. 현 의장인 파월의 임기가 5월 15일 끝나기 때문이다. 그때까진 워치가 아니라 파월의 시간이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미국은 통화정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준 의장 임기 만료 100일 전쯤 장구하던 나스닥지수는 워치 지명 이후 한 달간 4% 넘게 조정받았고, 워치 지명 전 9만달러에 육박하던 비트코인은 7만달러 밑으로 20% 넘게 추락했다. 그는 2011년 벤 버נק 의장의 양적 완화(채권을 사들여 돈을 푸는 정책)에 반대하며 14년 임기가 보장된 연준 이사직을 던진 전력이다. 이 때문에 향후 연준이 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의 고삐를 죄는 매과 성향으로 돌아설 것이라 우려가 확산된 것이다.

워치가 격정과 달리 금리를 낮추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선호하는 비둘기파로 변신할 것이라 전망도 있다. 워치가 임명권자인 트럼프의 뜻을 거스르기 어려울 것이라 시각 때문이다. 트럼프는 올 11월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압박해 왔다. 통상적으로 금리를 낮추면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워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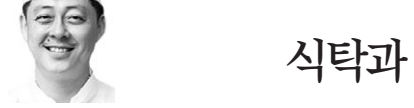
는 민주당 정권 때는 경제 브레이크를 밟으려 하고, 공화당이 집권하면 가속 페달을 밟으려 하는 전형적인 공화당 충성파”라며 그를 ‘정치적 동물(political animal)’이라고 규정했다.

워치의 분석이 매과인지, 비둘기파인지 알려면 두 달여를 더 기다려야 한다. 현 의장인 파월의 임기가 5월 15일 끝나기 때문이다. 그때까진 워치가 아니라 파월의 시간이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미국은 통화정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준 의장 임기 만료 100일 전쯤 장구하던 나스닥지수는 워치 지명 이후 한 달간 4% 넘게 조정받았고, 워치 지명 전 9만달러에 육박하던 비트코인은 7만달러 밑으로 20% 넘게 추락했다. 그는 2011년 벤 버נק 의장의 양적 완화(채권을 사들여 돈을 푸는 정책)에 반대하며 14년 임기가 보장된 연준 이사직을 던진 전력이다. 이 때문에 향후 연준이 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의 고삐를 죄는 매과 성향으로 돌아설 것이라 우려가 확산된 것이다.

워치가 격정과 달리 금리를 낮추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선호하는 비둘기파로 변신할 것이라 전망도 있다. 워치가 임명권자인 트럼프의 뜻을 거스르기 어려울 것이라 시각 때문이다. 트럼프는 올 11월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압박해 왔다. 통상적으로 금리를 낮추면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워치

유재덕의 공유주방 ⑧



식탁과 가장 가까운 것

특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일하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자주 봤다. 그런데 신기한 게 하나 있다. 무엇인가를 먹는 아이의 표정은 부모의 표정과 똑같다는 점이다. 맛을 확인하기 전의 미묘한 긴장, 입에 넣고 씹을 때의 작은 변화, 음식을 삼킨 뒤의 반응과 표정까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

수십 년 동안 같은 장면을 반복해 보아왔지만, 여전히 신기하다. 역시 아이들은 부모가 잘못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배우지 않는 듯하다. 부모가 음식을 대하는 태도, 식탁 앞에서의 표정, 낯선 맛을 마주하는 순간의 반응 같은 것을 조용히 받아들인다. 설명이 아니라 태도를 통해 배운다. 그런 면에서 식탁

과 거울(사진)이 가장 가까운 사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다.

한번은 서너 살이나 되었을까. 한 아이가 낯선 요리를 앞에 두고 섰듯 먹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다. 아이에게 음식을 설명해주기 위해 다가갔다. 하지만 옆에 앉아 있던 아버지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눈짓으로 나를 멈추었다.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자신이 먼저 그 요리를 한입 먹는다. 그러곤 별다른 표정 없이 고개를 한 번 끄덕였다. 그러자 아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안도감으로 편안해진다. 아이는 더 망설이지 않고 포크를 들어 음식을 입에 넣었다. 현실에선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지만, 이 장면은 초고속 카메라로 찍은 느린 화면처럼 기억에 남아 있다.



주방에선 늘 음식의 모양과 온도, 타이밍을 고민한다. 그러나 식탁 위에 완성되는 것은 내가 만든 것과는 다른 무엇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음식은 허에서 끝나지 않고 그 음식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 속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오래 요리를 만들며 알게 된 것이 있다. 한 사람이 음식을 대하는 방식, 그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과 닮아 있다는 점이다. 태도는 말보다 먼저, 말보다 오래 머문다. 가족이 함께하는 식탁은 음식을 먹는 곳일 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가 후세로 흘러가는 자리인지도 모른다. 파블루머

社說

북 인권법을 10년 간 짚대기로 만든 이른바 ‘진보 좌파’들

북한 인권법이 3일 제정 10주년을 맞았다. 이 법의 핵심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실태 조사와 북 인권 재단 설립이다. 그런데 재단은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미루면서 아직도 출범하지 못했고, 북 인권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도 비공개로 결정했다.

미국 의회가 2004년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자 민주당 일부는 “북한 내정 간섭”이라며 주한 미 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우리 국회에 발의된 북한 인권법은 민주당 반대 등으로 10년 넘게 묶여 있었다. 2016년 초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까지 도발하자 민주당도 처리에 동의했다. 그러나 문 정부는 인권 재단 사무실을 ‘재정적 이유’로 없앴고 북한 인권 대사로 임명하지 않았다. 유엔의 ‘북 인권 결의안’ 제안국에도 계속 불참했다. 김정은이 화날까 봐 ‘북 인권’이란 말 자체를 금기시했다.

현 정부 통일부도 북한 인권을 담당하던 ‘인권인도실’부터 폐지했다. 북 인권 침해 실상을 알리기 위한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도 ‘한반도평화공존센터’로 성격을 바꿨다. 과거 서독은 잘츠기터 중앙기독교보존소를 만들어 동독의 인권 침해 관련 증거를

차곡차곡 모았고, 통일 후 가해자를 처벌하는 근거로 활용했다. 지금 북에선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청소년도 공개 총살하고 있다. 강제 구금 시설에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한다. 북 인권 상황은 점점 악화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대북 인권 단체 등을 지원하던 보조금을 삭감했다. 미국도 트럼프 등장 이후 보조금을 삭감하는 추세다. 북 주민에게 외부 진실을 전파하던 미국의 소리 방송과 국정원의 대북 방송이 전부 꺼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 주민이 인터넷을 못 쓴다는 초보적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인권은 전 세계 진보·좌파의 핵심 관심사다. 그런데 한국에선 진보라는 외피를 쓴 세력이 인권 앞에 ‘북한’만 붙으면 희한하게도 철저히 외면한다. 일부는 탈북민을 ‘쓰레기’ “변절자”라고 공격하기도 한다.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 모두 ‘인권 변호사’라고 내세웠지만 북한 인권에는 말이 없다. 북한 인권법 10주년 인데 정부와 민주당은 흔한 입장론 하나 내지 않았다. 북한도 언젠가는 해방된다. 그 때 북한 인권 말살에 사실상 동조한 한국 내 이른바 진보좌파 세력에 대한 평가도 이뤄질 것이다.

주거·환율 요동, 이란 사태 충격 최소화 노력

미국과 이란 전쟁 확산 우려로 3일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거렸다. 코스피는 사상 최대 폭인 452.22포인트(7.24%) 폭락해 5800선이 무너졌고, 달러 대비 원화 환율도 26.4원 급등해 1460원을 훌쩍 넘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을 봉쇄하겠다”며 봉쇄를 선언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대외 변수에 취약한 한국 금융시장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도 “(이란과 전쟁이) 4-5주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며 “필요하면 (지상군도) 보낼 수 있다”고 했다. 이란은 ‘최대 규모’ 보복을 공언하며 탄도미사일과 드론으로 중동 지역의 미군 주둔지와 주변 민간 시설까지 공격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전략적 요충지다. 이곳이 막히면 배럴당 70달러대인 국제 유가가 150달러까지 치솟고, 해상 운임도 50-80% 급등할 것이라 전망이 나

온다. 한국은 원유의 70%, LNG의 20%를 중동에 의존하는데, 이 중 95%가 이 해협을 지난다.

정부는 중동산 원유 확보가 장기 계약 위주이고 비축 물량도 7개월분으로 국제에너지기구(IEA) 권고치(3개월분)보다 많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충격을 완화하는 안전판은 될 수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원유 공급 부족 우려에 따른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 유가와 환율의 동반 급등이 불가 상승과 기업 수익성 악화, 증시 변동성 확대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군의 전력 위력이나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은 조만간 풀려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이란 해군력 대부분이 파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전쟁은 의외의 변수가 언제든 돌출될 수 있다. 중동발 금융시장 충격이 여기에 마무러지고 실물 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이 공조해 변질한 대미를 해야 한다.

러시아 ‘北 포로’ 송환 요구, 위기로 인식해야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측에 북한군 포로를 돌려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국민회의 유용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밝힌 내용이다. 우크라이나 수용소에는 전쟁 중 붙잡힌 20대 북한군 포로 2명이 있는데, 모두 한국 귀순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런 사실을 러시아가 모를 리 없다.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 북한군 포로 송환을 요구했을 것이다.

이들 포로가 북한에 송환되면 어떤 운명을 맞을지는 모두가 안다. 잠시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다 사라질 것이다. 그 포로들 말대로 ‘3대가 멸족’될 것이다. 북한은 군인들에게 “포로가 되지 말라”고 지시했고 많은 북한 군인이 전장에서 자폭했다. 북한 포로들은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에 안 데려가면 나는 죽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단순한 호소가 아니라 살려달라는 절규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한국과의 관계뿐 아니라 인도주의적 측면도 감안해 북한군 포로를 러시아에 송환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호의가 계속되리라 장담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라도 러시아에 붙잡힌 우크라이나군 포로를 데려와야 하기 때문이다.

전 정부 때는 북한군 포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현 정부 들어 이런 움직임은 사라졌다. “북한군 포로 문제를 우크라이나와 협의하고 있다”는 상투적 입장만 반복할 뿐이다. 협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일절 밝히지 않고 있다. 사실상 북한 포로들을 방치하는 듯하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계산 때문에 북한군 포로 문제를 외면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복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강제로 사람을 넘겨주지 않는 건 국제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다. 남북 관계를 핑계로 북한 포로 복송을 방치하는 건 이 국제 규범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다. 국제법을 떠나 인간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문제를 결정 내리지 않은 채 시간을 끌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의 망동을 볼 때 어떤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 북한 포로들을 넘겨받으려 할지 모른다. 그렇게 해도 한국 정부가 크게 항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도 하고 있을 것이다. 정부가 남북 관계에 집착하더라도 이 두 생명만큼은 구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넘을 수 없는 선이 있고, 그것이 인도주의라는 사실을 김정인이 알게 했으면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찰스 1세

내란 유죄 법리 1600년대 영국왕 등장은 궤변

newdaily.co.kr 뉴데일리

영국 왕과 의회의 충돌은 내란 아니라 내전 의회도 군대 동원해 국왕과 두 차례나 전쟁 이런 비유라면 현 집권층은 독재자 크롬웰 될 듯

[편집자 주]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재판장 지휘권 부장판사는 느닷없이 찰스 1세를 소환했다. 윤 전 대통령을 찰스 1세에 빗대었다. 1600년대 영국왕-의회 관계를 21세기 대한민국 대통령-국회 관계에 등치 시킨 궤변이다. 영국 왕-의회 충돌은 각자의 군대를 동원한 내전이었다. 의회가 1.2차 내전에서 모두 이겨 찰스 1세를 투옥했다. 강한 군대 보유 크롬웰이 왕을 처형했다. 말만 공화정이지 철권 독재정이었다. 크롬웰이 죽고 왕정복고가 이뤄졌다. 찰스 1세의 의회 공격만 잘라내 버리면 것은 역사 왜곡이다.

계엄 선포가 내란?

회한한 일도 겪는다. 계엄을 구실로 대통령을 탄핵하더니, 급기야 《내란 우두머리(북한의 ‘내란 수괴’를 우리말로 표현한 것)》로 지목, 1년간의 구속 재판 끝에 종신형을 선고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힘이여!

여권 수뇌부는 사형 대신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재판관을 질타한다. **계엄 무산 공포로 우리 국민이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자유민주공화국 정당의 가치-원칙을 잃지 않으므로써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장동혁** 대표의 힘겨운 노력은, 《보수》로 치부되는 주요 매체들로부터 격려하는 기사하고 사사건건 발목잡기에 시달린다. **계엄령 선포가 내란의 동의어가 될 수 없다는** 법학계 원로들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로 취급된다. 무지, 중오, 욕심, 오만의 파고 속으로 사회 전체가 휩쓸려 들어간 게 아닌가.

어느 누구의 초동 지시?

내란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내란을 겪고 있는가. 아

닌가? 누가 그 주범인가? 상식과 양심으로 돌아가 보자. 2025년 12월 3일 밤 대통령이 내란을 시작했다고 생각하거나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있었는가? 계엄 선포에 놀랐고 군의 국회 진입을 걱정하는 것은 사실이나, 국민들에게는 내란이란 상상 밖의 일이었다. 총 한방 쏘지 않고 피 한 방울 없이, 불과 6시간만에 항복하는 내란 우두머리가 어디 있나? 나라가 소란해진 것은 오히려 현직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지목, **누구의 초동 지시였는지도 모르게 체포가 시작된 후부터가 아니었나?**

“동기” 무시에 등장한 “성경 읽기”

판결에 의하면, “동기”에 상관없이 “저놈 죽여라” 한마디면 곧바로 살인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국회는 절대 성역이기에**, 헌정 파괴범의 국회 잠입 정보를 대통령이 알려라도 국회가 거부하면 대처할 방법이 없다. **군을 국회-선관위로 보낸 일 자체가 내란의 “핵심”이라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야당의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 등으로 정부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생각을 윤 대통령이 하게 됐음”을 인정했고, “계엄 목적이 장기 독재라는 검사 측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목적”과 별개라는 구실로 계엄 선포 “동기”는 내란 여부 판단에서 배제됐다. 체제 존속 기로에서 고심하던 대통령의 결단을 재판부는 “**성경 읽기**” 비유로 격려했다.

찰스 1세 처형과 크롬웰 철권독재

지 판사는 국가수반의 내란죄 역사적 선례나 외국의 사례를 찾기 위해 고심했다. 결국 1649년 영국의 찰스 1세 처형

을 선례로 거론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억지 주장**이다. 찰스 처형은 왕권신수설을 고집하는 왕과 왕권을 제한하려는 귀족 의회 사이에 벌어진 **오랜 내전에서 왕당파가 패배함으로써 비롯된 일이다. 왕의 의회 공격의 결과가 아니다.** 이란 상상 밖의 일이었다. 총 한방 쏘지 않고 피 한 방울 없이, 불과 6시간만에 항복하는 내란 우두머리가 어디 있나? 나라가 소란해진 것은 오히려 현직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지목, **누구의 초동 지시였는지도 모르게 체포가 시작된 후부터가 아니었나?**

처형에 대한 반응은 경악과 수치심이었다. 소신을 굽히지 않은 채 의연하게 처형당한 왕을 순교자로 추앙하는 분위기가 일었다. 의회주의자들조차도 왕의 처형을 《**불편한 기억**》으로 여기지 자랑거리로 삼지 않는다. 1661년 영국 교회는 1월 30일을 《**찰스 1세 순교자 추모일**》로 지정했다.

우리 모두에게 묻는다

대통령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라면 몰라도, 반역 또는 내란죄로 처벌받는 것은 **반란 또는 혁명으로 국가체제가 전복되었을 때일 뿐**이다. 온전한 헌정 체제에선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헌정 체제는 지금 온전한가? 아니면 내란을 겪고 있는 중이거나, 대한민국 헌정 수호 세력은 형해만 남은 채 실질적으로 패배한 것인가?

② 이제 출직해지자. 지금 **이재명** 체제하 대한민국은 1948년 출범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인가 아닌가?

③ 국민이 계엄을 거부함으로써 지켜려 했던 가치들-자유와 법치, 공정한 인권 보호와 사회 보장, 투명한 선거제

- 도, 양심과 언론의 자유, 재산권 보장과 시장경제 체제를 통한 지속발전 등-은 윤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몰아 처벌하는 헌 정권에 의해 더욱 잘 지켜지고 있는가?
- ④ 일당독재 국회와 대통령이 답합하는 헌 체제는 더 정 의롭고, 안정적이며, 덜 부패했고, 나라 발전에 효율적인가?
- ⑤ 체제를 뒤집으려는 쪽이 내란 세력인가 지키려던 쪽이 내란 세력인가?
- ⑥ 국민의 절반이 뽑은 대통령이 종신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사회는 기이할 정도로 조용하다. 이 정적은 희망인가, 체념인가, 자강심인가, 공포인가?
- ⑦ 침묵의 피난처로 은신한 국민 모두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 ⑧ 주요 언론들이 보여주는 계파 싸움-표방 장악 싸움이 정치의 전부인가?
- ⑨ 고령화, 실업률 증가, 국가-가계 부채 폭증 등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국민도 정치 지도자들도 전직 대통령을 가혹하게 처벌만 하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리라고 믿는가?
- ⑩ 왕권신수설을 고집했지만 의연하게 단두대에 올랐던 찰스 1세를 순교자로 추모하는 영국인들은, 세계 최초로 의회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지금까지 일련군주제 아래 정치 적 안정을 누리고 있다. **우리 한국인은 대통령을 두 차례 탄핵하고 감옥으로 보냈다. 영국인들 보다 잘나서 그런가?**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서양사) / 전 KBS이사장 / 전 주러시아대사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6년 2월 26일 게재 되었습니다.

